



▲상상관 출입구에서 근로 학생이 출입자의 체온을 확인하는 모습이다. 각 건물의 출입구에서는 신분증 확인, 발열체크, 출입 기록 작성, '문진 확인' 스티커 부착 등의 절차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대학본부 방역 '2.5단계→2단계'

달라진 학사 대책, 2학기 학사 운영 안정화 되나

지난 1일 대학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2학기 블렌디드 수업을 전면 비대면 강의로 대체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본교의 교내 방역 대책이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전면 비대면 강의 중 일부가 22일부터 제한적 대면 수업으로 대체된다. 한성대신문사가 본부의 대책을 정리했다.

대면 가능해진 2학기, 학사 제도도 개편

- 제한적 대면수업 · 대면시험 여부 제한적 대면수업 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
- 학점이월제 적용 범위 확대돼

제한적 대면수업은 제한적 대면수업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업 실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제한적 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강의는 위원회에 수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의는 해당 강의의 ▲인원 ▲방역 상태 ▲거리두기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한다. 조준철(학사운영팀) 팀장은 "대면수업은 20인 이하의 인원이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9주차 이후의 수업운영에 관해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재논의 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학기 중간고사는 제한적 대면수업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일부 과목에 한해 대면 시험으로 진행된다. 7주차는 대면 시험, 8주차는 비대면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조 팀장은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의 각 일정이 겹치지 않게 설정해 혼선의 여지를 막았다"고 전했다.

본부는 2학기 잔여 학점을 다음 년도 1학기 이월할 수 있도록 학점이월제를 개정했다. 학점이월제는 잔여학점을 3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로 이월해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해당 학년에 한해 학점 이월이 가능했지만, 확대된 제도에서는 상위 학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 조 팀장은 "한시적인 변경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돼도 변경된 학점이월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수강신청을 포기한 과목도 잔여 학점으로 남을 경우 다음 학기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본부, 2학기 학사 운영 안정화 위한 보완책 수립

- 절대평가 평가기준 재수립
- 교수 강의 제작 지원 통해 온라인 강의 품질 개선
- 신분증 인식기 설치해 방역 강화

본부는 1학기에 이어 2학기 성적절대평가로 산정하며, 자세한 성적 평가기준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학기는 절대평가에 대한 상세한 평가기준서가 마련되지 않아 학내 학점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 장재혁(교육혁신지원팀) 팀장은 "교육학에서 통용되는 성적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타 대학의 평가기준서를 참고해 제작 중"이라며 "재수립된 평가기준서 A학점의 비중이 40% 내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립된 절대평가 평가기준서는 중간고사 이전에 교수에게 공지될 예정이다.

지난 1학기에 나왔던 비대면 강의의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본부는 지난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원격교육센터, 첨단강의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원격지원센터는 교수에게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 강의 시스템 헬퍼 지원 등 온라인 강의 제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첨단강의실은 감사 추척 카메라, 다중화면 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강의 제작을 지원한다.

장 팀장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강의의 품질 개선은 물론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교수에게 태블릿과 웹캠 등을 지원하거나 교수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강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본부는 학교 내 각 건물 출입구에 신분증 인식기를 설치했다. 제한적 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명부작성보다

정확하게 신원과 동선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신분증 인식기를 사용하면, 학교 내 모든 인원의 이동 동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습·실습과목' '시험 부정행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 실습·실기 과목 수업 운영 방안 및 비용 환불 문제 해결방안 제시해야
- 온라인 시험, 공정성 문제도 여전히

지난 학기 일부 학생은 실습·실기 강의의 운영 방식이 부담스럽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익명을 요청한 무용학과 학생은 "여러 차례 강의를 한 번에 몰아서 3시간 이상 들으니 체력적으로 버거웠다"며 "연강이 있는 학생은 5시간 이상 강의를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본부는 8월 28일 진행된 제5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에서 실습·실기 강의의 시스템 및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실습·실기 강좌에 대해 마련된 운영 방식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지훈(기공 3) IT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실습·실기가 필요한 과목에 대해선 정확한 강의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때까지 대학본부에게 응답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실습·실기비 환불 및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학생의 의견을 종합해 4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습·실기비 환불 및 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본부에 2학기 이월 금액과 집행 상세내역, 환불 과정에 대해 계속해서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험의 공정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학기 중간·기말고사가 일부 대면 시험을 제외하고 비대면으로 시행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학생이 서로 시험 문제를 공유하거나 시험 도중 교재를 참고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조태연(경영 3) 학생은 "시험을 서술형으로 시행하거나 시험 외 분야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본부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에게 e-class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조 팀장은 "현재 e-class 시스템에는 서술형 시험 시스템, 무작위로 문제를 배열하는 시스템 등 부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험 방식이 마련되었다"며 "이외에도 과제 대체 및 오픈북 시험 진행 등 부정행위가 방지될 수 있는 형식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3학점 부족으로 졸업 못해... 대학본부 “전공지정 과목 이수 학점 완화 검토 중”

지난 8월 18일, 수강신청 과정에서 전공지정 과목 이수학점 중 3학점이 부족해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발생했다. 현재 우리학교 재학생은 졸업하기 위해 전공이수 학점, 교양이수 학점, 트랙별 졸업요건 등을 충족해야한다. 트랙제의 전공이수 학점은 총 39학점으로 전공 기초 과목 3학점, 전공선택 과목 18학점, 전공지정 과목 18학점으로 이뤄져있다. 이 중 전공지정 과목은 트랙필수 과목 15학점과 취·창업 과목 3학점을 이수해야 충족된다.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트랙은 금융·데이터분석트랙과 부동산자산관리트랙이다. 금융·데이터분석트랙에서는 지난 학기 4학년 전공지정 과목이었던 ‘SAS/R Data Science(이하 SAS/R)’ 강의가 한 분반만 열렸다. 해당 강의는 실습 강의로 분반당 들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되면서 4학년 학생 중 일부가 수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트랙제에서는 1학기에 개설된 전공 과목이 2학기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듣지 못한 학생은 전공지정 과목의 이수학점이 부족하게 된다. 금융·데이터분석트랙이 소속된 경제학과 교학팀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준영(무역 3)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학과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교무처에 해당 문제를 건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자산관리트랙의 경우, 2학년 과목인 ‘부동산사법’의 이수구분 변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17학번이 2학년이었던 2018년 당시,

해당 강의는 전공선택 과목이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부동산사법 강의를 2020년부터 전공지정 과목으로 변경됐다. 부동산사법의 이수 구분 변경으로 인해 강의를 2학년 때 들은 17학번 학생은 전공지정 과목 이수학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부동산학과의 교학팀은 해당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학과 조교는 “교육과정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흔한

상황”이라며 “2021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교육과정변경으로 인한 이수인정 신청’을 통해 전공선택 과목으로 구분된 부동산사법을 전공지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학본부는 전공지정 과목 이수 학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윤철(학사운영팀) 팀장은 “현재 100명의 학생이 전공지정 과목 이수 학점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공지정 이수학점과 전공선택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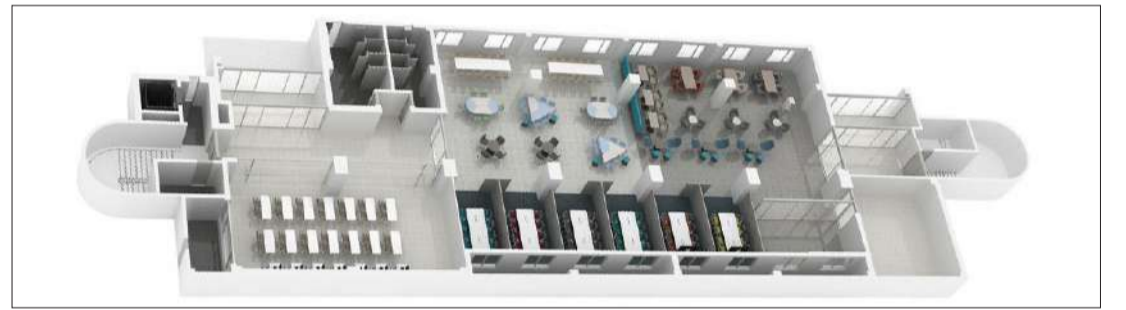
학점에 상관없이 39학점을 채운 학생에 한해 전공지정 과목 이수학점 조건을 15학점으로 낮추는 안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현재 학교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간담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상상파크 II’ 오는 10월 중 개관

공학관 A동 지하 1층에 설립되는 ‘상상파크 II(가칭)’ 공사가 오는 10월 중 완공될 예정이다. 상상파크 II는 1개 층으로 구성되며, 소모임활동공간, AI·빅데이터 실습실(이하 실습실) 등이 들어선다. 상상파크 II의 완공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미영(C&C교육지원팀) 팀장은 “기존의 상상파크는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기자재를 중심으로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상상파크 II는 창의융합활동,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소모임활동공간에는 학생이 토론 및 발표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공간에서는 이동식 빔 프로젝터, 대형 모니터 등 기자재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기자재는 상상파크 II 출입구에 위치한 안내사무실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실습실에는 AI·빅데이터 관련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공간이 구축된다.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 고성능 노트북, 애플 컴퓨터 등의 기자재가 배치되며, 예약을 통해 학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실습실과 소모임활동공간 바깥

에는 화이트보드나 붙은 가변형 파티션과 이동식 책상 및 의자가 설치된다. 상상파크 II는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했던 상상파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 팀장은 “상상파크 II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이 토론,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상상파크는 3D 프린터, VR 시뮬레이터 등 기자재가 배치되어 실습·실기 위주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했다”며



▲10월 중 개관할 상상파크 II의 실내 조감도다. (사진 제공 : C&C창의융합교육원)

“상상파크 II는 모든 학생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교 C&C교육지원팀은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상파크 II

이름 공모전을 진행한다. 9월 22일 화요일까지 접수하며, 28일 당선작을 최종 발표한다. 참가자 중 2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1만 원권이 주어지며, 당선작 제출자는 상금 20만 원을 지급받는다. 김준수 기자 jseo53493@gmail.com

학술정보관, 2학기 온라인 독서클럽 모집

오는 9월 25일까지 학술정보관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온라인 독서클럽 참가를 신청 받는다. 온라인 독서클럽은 학생과 교수가 모여 원하는 도서를 읽은 후 독서 토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학생 대상으로 1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3~5명의 학생과 독서멘토인 교수로 이뤄진 독서클럽을 구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이 교수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교수를 선정하기 어려울 경우 학술정보관에서 지정한다. 클럽의 팀장을 맡은 학생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교수를 제외한 팀원 모두가 상상독서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마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독서클럽은 총 4번 활동하며, 10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운영된다. 본 프로그램은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Webex와 ZOOM을 활용해 운영된다. 참가자는 제출한 도서감상문과 회차별 활동 보고서, 출석, 태도 등 개인별 평가에 따라 A, B, C등급을 받는다. 등급에 따라 비교과포인트 10~30pt가 차등 지급된다. 김예진(학술정보관) 팀원은 “독서클럽은 인문학 학습여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김선수 기자 rdjrtf@naver.com

HS 트랙진로탐색 프로그램 참가자 접수 시작해

취업지원팀이 오는 10월 5일까지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HS 트랙진로탐색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HS 트랙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트랙을 선택하기 전 해당 트랙에 대해 탐구하거나, 희망 트랙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트랙 및 진로 탐색에 대한 계획서를 취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 발표는 10월 8일에 진행

되며, 선정된 참가자는 곧바로 활동에 들어간다. 참가자는 계획서에 썼던 내용을 토대로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을 마친 참가자는 브이로그, PPT, 분석 자료집 등의 활동 결과 콘텐츠를 1월 8일까지 취업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활동비는 인당 최대 6만 원으로, 증명자료 제출 시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 전원에게 일괄 지급된다. 참가자는 프로그램 활동 시간당 비교과포인트 5pt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pt를 획득할 수 있다. 콘텐츠 평가 때 등급을 C 이상 획득해야 이수자가 될 수 있으며, 장학금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수 콘텐츠 선정 학생은 최대 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으며, 해당 콘텐츠는 본교 e-class에 업로드 된다. 콘텐츠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은 진로상담사, 취업지원팀 팀원 등으로 구성된다. 김준수 기자 jseo53493@gmail.com

한성대신문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hansungnews.com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hansungnews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에브리타임
게시판 >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hansungpresscenter

대학가 등록금 반환, 가능할까?

〈편집자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실시된 온라인 강의는 등록금 반환 논란을 일으켰다. 대학은 재정이 힘들어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학생은 걷기 시위,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만을 드러냈다. 몇몇 대학에서 등록금 일부 반환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학생의 불만은 계속됐다.

결국 지난 7월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를 중심으로 모인 3,951명의 학생은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전대넷은 민사 소송 청구 금액으로 국립대의 경우 1인당 50만 원, 사립대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책정했다. 반면 대학에는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입장과 등록금의 10% 내외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로 시작돼 법적 투쟁까지 이어진 등록금 반환 논쟁. 대학과 학생 측은 어떤 입장을 두고 맞서고 있을까. 등록금 반환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주진술 기자 twoxo@naver.com



사진 제공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법적 근거는 있나?

대학은 등록금을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법적으로 수업이 취소된 후 아무런 보장조치가 없었을 때만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교육부령 제1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등록금 반환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규정한다.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는 학교의 수업이 전학이나 전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만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명시한다.

올해 1학기의 경우 교육부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을 2~3주 연기했다. 개강을 연기한 대학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감축한 수업일수를 보충했다. 대학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대면 수업과 같은 질의 수업을 제공했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는 전제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학교장이 매 학년마다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 측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 3가지다.

학생 측은 온라인 수업의 낮은 질로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대학이 자신의 책무인 교육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 학생이 돌입한 소송 역시 위 3가지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민법」 제741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산 또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맞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대학의 부당이득과 학생의 손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학의 등록금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화난사람들'의 박재천

대학 측 입장

- 1학기 온라인 수업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
- 적립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원칙적으로 불가
- 등록금 동결·학령인구 감소 대학 수입 줄어드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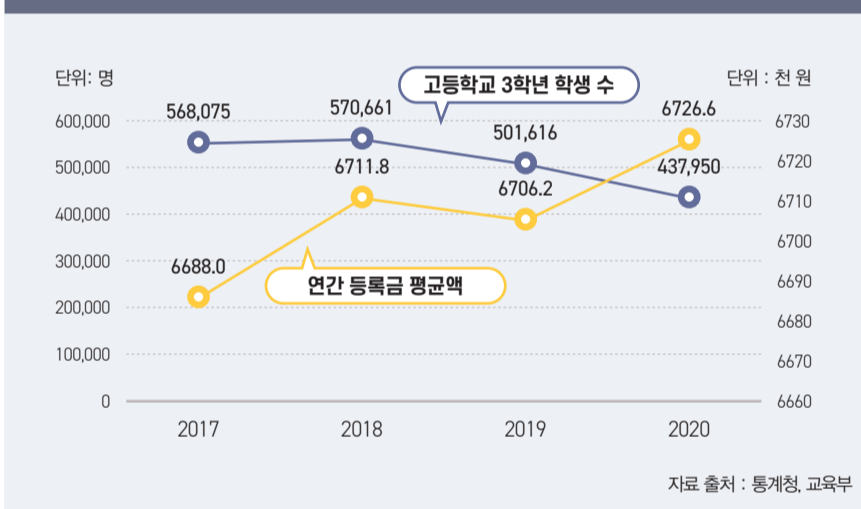
변호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의 요소를 증명한다면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줄어든 수입 vs 늘어난 적립금

대학은 수입이 줄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먼저 지목된 것은 등록금 동결이다. 2009년 이후 반값 등록금이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12년간 대부분의 대학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됐다. 「2020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6개 중 181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10개 대학은 등록금을 인하했다.

반면 대학의 운영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대학의 인건비 부문에 해당하는 대학 전임교원의 연구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0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최근 4년 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와 연간 등록금 평균액



자료 출처 : 통계청, 교육부

따르면 2019년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의 연구비 총액은 5조 9,383억 원으로 전년보다 3,529억 원 증가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도 8,264.2만 원으로 전년보다 463.9만 원 증가했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도 수입이 줄어드는 원인이라고 언급한다. 대학의 주요 수입인 등록금 자체가 대학생의 감소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2018년 57만 661명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2019년 50만 1,616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올해인 2020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43만 7,950명으로 작년에 비해 6만 3,666명 줄어들었다. 작년 말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이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1팀장은 “2020년과 2021년은 입학생 수가 줄어들어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 수입이 2년간 21억1400만 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생 측은 대학의 많은 적립금을 지적

한다. 적립금이란 대학이 건축비, 연구비 등을 위해 적립한 돈을 말한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2월 말 누적적립금이 100억 원 이상인 대학이 87곳이다. 이 가운데 홍익대, 이화여대 등 20곳의 누적적립금은 1,000억 원에 달했다. 한성대의 누적적립금은 188억 원 수준이다.

4년제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은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0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은 7조 8,817억 원이다. 전년도인 2018년에는 7조 7,834억 원으로 1년 사이 983억 원 증가했다.

대학은 학생 측의 주장에 정해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누적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처가 정해진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후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게다가 「행법」에 의해 형사상 횡령·배임죄를 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행법」 제355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적립금으로 등록금 반환이 가능한 대학과 불가능한 대학이 나뉜다는 것도 적립금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제시된다. 실제로 수도권 사립대학의 평균 누적적립금은 약 826억 원인 반면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평균 누적적립금은 약 283억 원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적립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적립금의 용도를 지적하는 대학의 주장에, 학생 측은 적립금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1년 반값 등록금이 화제였을 당시 4년제 사립대학 104곳이 적립금의 용도를 변경해 학생에게 장학적립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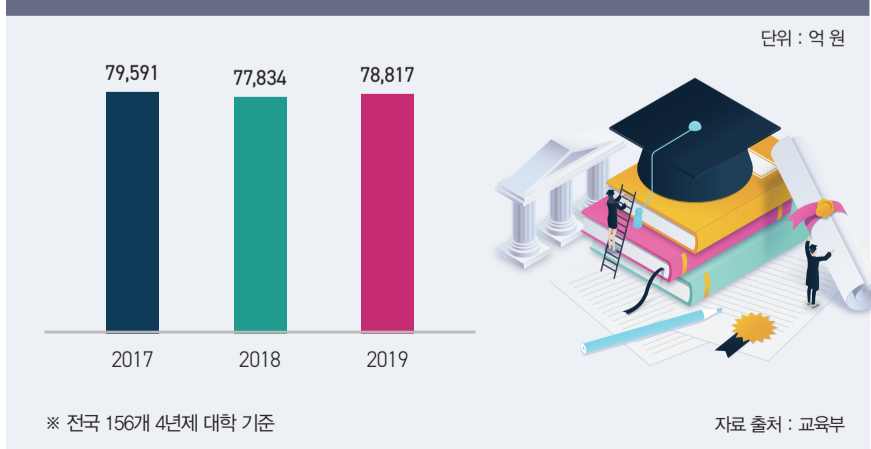
학생 측이 주목하는 적립금은 건축적립금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대학은 노후교실의 개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건축적립금의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학생 측의 입장이다.

판결을 기다리며

대학은 등록금 반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예산 또한 넉넉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반면 학생 측은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으며, 적립금과 남은 예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양측의 입장 모두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결과는 평행선을 그어고 있다.

팽팽한 대립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등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된다. 등록금 반환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현서 변호사는 뉴스1과 인터뷰를 통해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 논쟁이 생긴 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법정 투쟁 기간까지 늘어난다면, 논쟁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과연 얼마나 빨리 판결이 날 수 있을지, 법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3년 간 대학의 누적적립금



※ 전국 156개 4년제 대학 기준

자료 출처 : 교육부

학생 측 입장

- 법적 근거는 충분히 확실한 증거 찾을 것
- 누적적립금과 남은 예산, 등록금 반환 비용으로 충분히
- 적립금 목적 변경은 가능
- 과거 장학적립금 늘어난 사례 있어

청년이 묻고 현장이 답하다

<편집자주>

나 말고 다른 사람, 그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묻는 것보다 그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던가. 종이에 적힌 자료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욱 현실적이다. 나를 그로 바꾸기 위해 신문사 밖으로 향한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생생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이번에는 동물 유기 문제를 조명한다. 인력한 집에서 살다가 주인에게 버려져 한 평도 안되는 보호소의 견사로 들어가기까지, 동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 보기 위해, 개들의 고아원이라 불리는 유기동물 보호소로 직접 가 봉사를 해보았다.

김선우 기자 rdjrrt@naver.com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기약 없는 철창 속 기다림

누군가 버린 개, 다신 아프지 않개'

오전 7시, 파주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 '행동하는 동물 사랑'으로 향한다. 버스를 타고 보호소 근처 정류장에서 내려 600미터쯤 걸어가니 보호소가 보인다. 개들이 짖는 소리가 고막을 뚫고 들어온다. 보호소는 비닐하우스 형식의 동이 열 동 정도 있고, 각 동에는 개가 지내는 공간인 견사가 여러 개 있다. 보호소에 들어서자 입구 쪽에 있는 별채 동에 개들이 마구 짖는다. 개가 짖는 것은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나타낸다.

활동을 하지 않아 산책 도중에 배변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매일 30분 동안 정해진 길을 따라 산책을 시킨다. 영역동물인 개는 좁은 곳에 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진희(이름)만 아니라 한 평 남짓의

좁은 견사에 사는 보호소의 개는 주기적인 산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매일 산책을 하는 개는 3마리뿐. 다른 개는 봉사자가 많이 오는 날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산책할 수 있다. 진희를 데리고 산책로로 향한다.

진희의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자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산책을 나갈 생각에 펜스를 치며 풀쭉풀쭉 댄다. 보호소에서 나오자마자 사람이 뛰기 시작한다. 멍때려 온 힘이 다해 땀이 흐른다. 더운 날씨에 등에 땀이 맺히기 시작한다. 약 2km를 뛰고 난 후, 보호소에 돌아갈 시간이다. 사람은 돌아가기 싫은 지 다른 길로 가려한다. 아찔 수 없이 간식으로 사람을 보호소로 유인한다. 사람이 한 평이 안 되는 견사로 다시 들어간다.

새 마리의 개를 산책시키고 나니 12시다. 날씨가 갑자기 흐려져 소나기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한다. 비가 많이 내리니 날씨가 습해져서 개의 피부에 좋지 않다. 하지만 보호소에는 습한 날씨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조금 뒤, 다행히 날씨가 갠다. 밥 먹음 시와 나를 뺀 나머지 컨테이너 방에 들어간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진숙이가 안에서 쉬고 있다. 보호소 직원이 밥을 먹으면서 보호소에 들어오는 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대부분의 개는 보호소에 들어올 때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요. 전신 피부병에

걸린 채 버려진 개도 있고,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는 개도 있어요. 복래는 꼬리가 잘리를 학대 속에서 구조돼 위탁처에서 지내오 마자 사람이 뛰기 시작한다. 멍때려 온 힘이 다해 땀이 흐른다. 더운 날씨에 등에 땀이 맺히기 시작한다. 약 2km를 뛰고 난 후, 보호소에 돌아갈 시간이다. 사람은 돌아가기 싫은 지 다른 길로 가려한다. 아찔 수 없이 간식으로 사람을 보호소로 유인한다. 사람이 한 평이 안 되는 견사로 다시 들어간다.

밤을 먹은 뒤 오후 일정이 시작된다. 오후에는 각 견사에 있는 개를 번갈아 운동시킨다. 동 안에 운동 공간이 마련돼있다. 개가 운동하는 사이, 쓰레받기와 삼을 들고 견사 안으로 들어간다. 개의 변을 쓰레받기에 담고, 파놓은 구멍을 삼으로 메꾼다. 개가 누울 수 있는 패렛에 깔린 이불의 먼지를 털고 반듯이 깔아준다. 이불이 없는 견사는 패렛 위 먼지를 물티슈로 닦는다.

견사를 청소하다 보니 개가 견사에 들어간 지 두 평 남짓의 컨테이너 방에 들어간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진숙이가 안에서 쉬고 있다. 보호소 직원이 밥을 먹으면서 보호소에 들어오는 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대부분의 개는 보호소에 들어올 때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요. 전신 피부병에

많은 동들의 개들을 운동시키고 견사 청소를 끝마치니 오후 4시다. 오후 봉사가 끝난다.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겨 보호소를 나서기 전, 직원이 내게 말한다. "버려지는 개들은 많아지만 보호소의 재정적 상황과 견사 부족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개들을 위해 SNS에 개인입양을 부탁하는 글을 올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보호소의 개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한 마리의 개가 평생 함께 할 가족을 만나는 것조차도 기적과 같죠."

집에 가기 위해 보호소 입구를 나선다. 개들이 떠나는 나를 힐끔 너머로 바라본다. 개들이 짖는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사지 마세요, 키우지 마세요."

집을 떠나 거리를 배회하는 반려동물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거리로 내몰린 동물의 수는 13만 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의 수는 ▲2017년 102,593마리 ▲2018년 121,077마리 ▲2019년 135,791마리로 꾸준히 수가 증가했다. 애정의 대상이었던 반려동물이 유기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동물구조센터 동물구조119의 임영기 대표를 만났다.

동물과 인간을 대등한 입장에 두고, 동물 본연의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

Q. 동물구조119는 어떤 곳인가?
A. 시민의 신고를 받아 유기견, 길고양이 등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병원에까지 인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유기동물 입양, 정책 개발, 교육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위험에 처한 유기동물을 구조하는 곳은 많지 않다. 2018년 5월에 유기동물을 전문적으로 구조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설립하게 됐다.

Q.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A. 사람들이 펫샵에서 동물을 장난감 고르듯 충동적으로 입양해 유기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이 커지면서 동물의 수는 많아지는데, 제대로 키우려는 의식은 빠르게 팽창하는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도 있다. 사회 전반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동물에게 지출되는 병원비와 사료값이 부담돼 유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려동물 번식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한 번에 많은 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운영기준이 높아졌다.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번식업자가 폐업하면서 데리고 있었던 반려동물을 한꺼번에 유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보호소에서 품종이 똑같은 개가 한꺼번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번식업자가 버린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

Q. 유기동물의 증가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A. 시민들이 동물유기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에는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로 과태료가 매겨졌지만 현재는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에서도 동물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키우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동물을 사지 말아야 한다. 반려동물을 책임질만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는 동물등록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동물등록제가 완벽되면 유기동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 100% 실현 이후에는 동물이력제가 마련돼야 한다. 유기된 동물이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한테 판매됐는지 추적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동물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Q. 앞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A. 동물권에 대한 주장은 2000년대 초반 동물보호 활동으로 시작됐다. 보호란 감정이 아니라 동물을 지출하는 병원에 대한 보호를 넘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라고 인식해야 한다.



▲우경(만 2세), 김정색 우아한 털과 하얀색 눈색이 특징으로 사람과 놀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한다.



▲강두(만 7세), 하얀색 풍성한 털과 처진 눈이 특징으로 예교가 많지 않으며 카리스마가 넘친다.



1평 남짓도 안 되는 견사, 그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사진제공: 동물구조119

청년 정치란 변화에 발맞추는 것이다

“사회의 변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는 청년이다”

〈편집자주〉

제21대 총선에 당선된 40대 미만 정치인 수는 13명이다. 전체 국회의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제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무려 10명이나 늘어났다. 제21대 총선은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첫 선거이기도 했다.

늘어난 젊은 정치인 수와 낮아진 선거 연령으로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거나 고민해본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청년 정치인은 청년 정치를 어떻게 정의할까? 본지는 총 5번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두 번째로 만난 정치인은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이자 당내 유일한 국회의원인 용혜인 의원이다.

주진술 기자 twoxo@naver.com

Q. 청년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변하는 사회에 맞춰가는 정치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존재는 청년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당장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Q. 많은 기성세대는 청년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A. 이기적인 발언이다. 청년은 정치에 관심이 많다. 다만 그만큼 성과를 얻지 못해 좌절한 것이다. 광우병 시위, 반값 등록금 시위, 세월호 촛불집회 등 지금까지 청년이 주도한 사회 운동은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은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기성세대는 청년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지난 사회를 돌아봐야 한다.

Q.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A. 지금이야말로 청년 정치를 판단할 기로에 서었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 정치인이 한국 정치의 많은 자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청년 정치가 잘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시기이기도 하다. 현재 청년은 자신이 가진 불안정함 때문에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 있다. 서로 흩어져있는 청년을 모아 화합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Q. 청년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A.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자식 세대는 언제나 부모 세대보다 부유했다. 대학 졸업장, 기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가 등장했으며, 대학 졸업장만으로 청년까지의 삶이 보장되던 시대는 지났다. 당장의 미래도 계획하기 힘들어졌다. 계획된 삶이 불가능하면 불안정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Q. 청년의 불안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소득을 말한다.

월급 외에 일정한 수입이 생긴다면 삶을 계획하고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 앞으로의 사회는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시켜줄 수 있다.

Q. 청년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A.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문제를 알 수 있고 해결도 가능하다.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기성 정당에서도 청년의 정치 유입을 확대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청년의 정치 유입이 늘어나 청년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그 안정을 바탕으로 청년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Q. 청년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청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나?

A. 스스로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한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로서 어떤 정치인이 원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판단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직업적으로 정치를 받아들이는 것도 정치 참여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일도 정치 참여의 일부다. 더 나아가 새로운 정치 세대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 기성세대 정치인에게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공통적인 서사가 있듯 지금 청년에게는 불안정함이라는 서사가 있다. 새로운 서사를 가지고 정치적 세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Q. 청년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궁금하다.

A. 젠더 분야다. 예전에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사회 구도를 가르는 게 추세였다면 지금은 젠더 분야가 사회 구도를 가르고 있다.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젠더 분야는 과도기에 있다. 젠더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일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갈등과 대립이 끝나면 좀 더 평등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정치에 참여하고픈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A. 사회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나 하나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사회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안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란다. 한 명의 청년으로서 시작한 정치가 사회적,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A. 우선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싶다. 그 다음은 기본소득당이 더 많은 밀레니얼 세대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마지막으로 청년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아닌 용혜인이라는 이름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 앞으로도 꾸준히 기본소득의 실현을 향해 노력할 것이다.



▲본인의 국회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인 용혜인 의원의 모습이다.

용혜인

2010

진보신당 입당

2015

노동당 전국위원

2016

노동당 비례대표 출마

2017

청년자파 대표 당선

2020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2020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 삼 학 송 ·

핑계에 갇힌 등록금

지난 학기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학교는 실습·실기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교수는 강의 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수업을 과제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몇 년 전 영상을 소위 재탕하는 강의도 있었다. 학생이 직접 사비를 들여 노트북과 웹캠 등 기자재를 구매해,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실습·실기가 중심인 강의를 듣는 학생은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 학교 시설 이용 제한 등을 이유로 등록금 부분 환불을 요구했다. 실습·실기 위주의 강의를 듣는 디자인대학 및 회화과 학생회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예산안, 등록금 차등 반환 등을 주장했다.

지난 6월 30일, 대학본부는 요구를 수용해 모든 재학생에게 20만 원씩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급되는 돈은 한성희망장학금 모금 운동과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됐다. 온라인 강의로 인한 학생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학기 시작을 앞두고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다시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본부는 9월 1일 계획했던 블렌디드 강의를 취소하고, 전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됨을 알렸다.

이번 학기 코로나19 대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온라인 강의 3시간 중 1~2시간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 외에는 1학기 온라인 수업 대책과 다른 점이 없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2학기 후반부에 블렌디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변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 역시 지난 1학기와 비슷하다.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습권 침해,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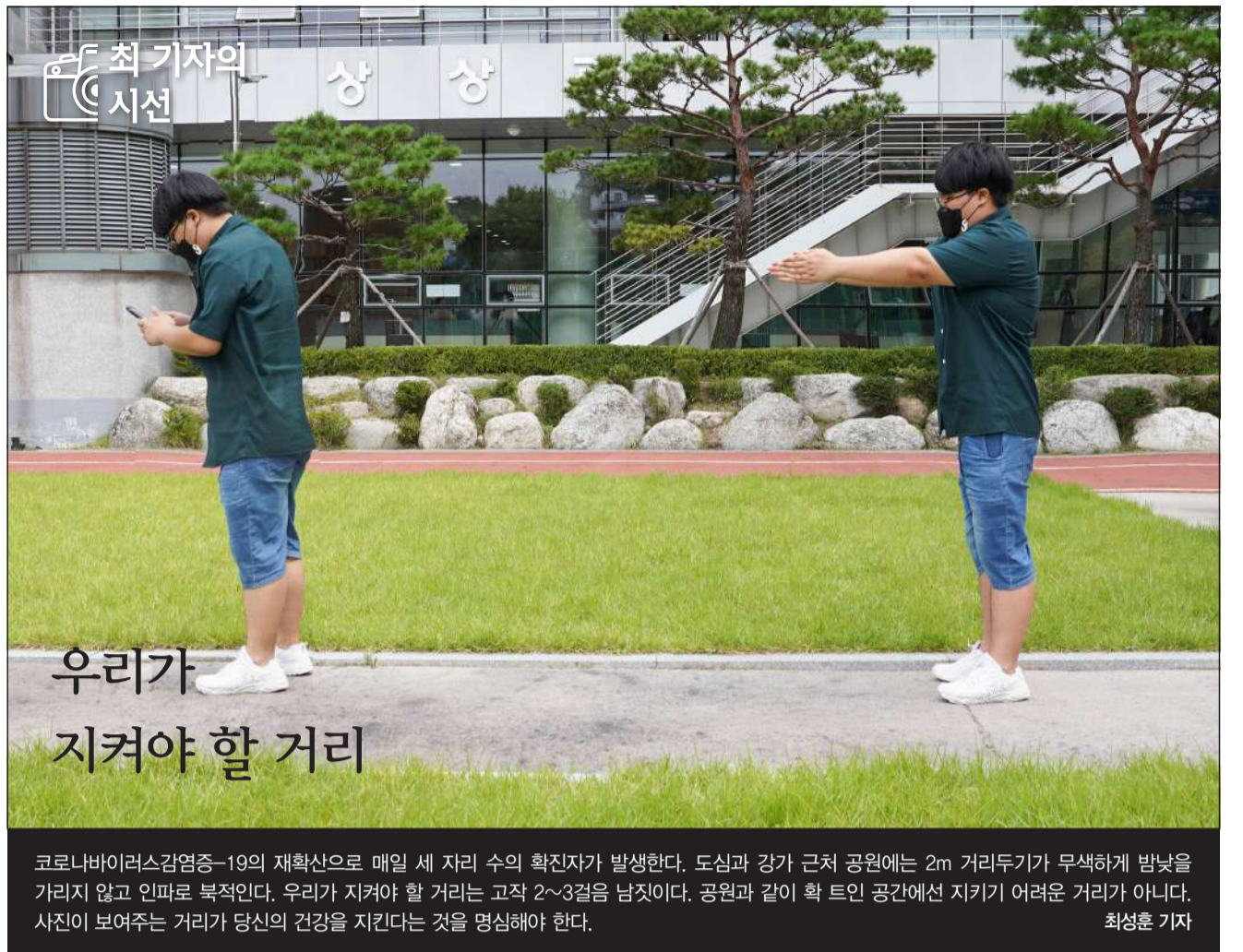
이용 제한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20년 하반기 등록금 재조정(인하)'에 동의하는 학생들은 무려 93.6%에 달했다. 1학기 99.2%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학기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은 지난 학기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 28일 진행된 5차 간담회를 통해 본교는 공개하기로 했던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가 어려워졌으며, 2학기 등록금 반환도 확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이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본교의 입장이다. 결국 본교의 대답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본교가 말한 등록금 반환 소송은 지난 7월 1일 전대넷의 주도로 이뤄진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이다. 46개 대학 3,362명이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본교 재학생도 256명이 참여했다. 해당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됐다. 민사 소송은 통상적으로 최소 1~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결국 우리 대학은 문제에 대한 대응을 긴 시간 유보한 셈이다.

본부의 대책, 학생의 요구 등 2학기로 넘어오면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지만, 등록금 부분 반환만 유보된 상황. 등록금 반환 요구를 더 강하게 관철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대학의 대응을 뒤로 미루는 핑계가 돼버린 아이러니. 학교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당혹스럽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학의 태도는 학생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정말 학생을 위한다면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박희연 편집국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으로 매일 세 자리 수의 확진자가 발생한다. 도심과 강가 근처 공원에는 2m 거리두기가 무색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파로 북적인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거리는 고작 2~3걸음 남짓이다. 공원과 같이 확 트인 공간에선 지키기 어려운 거리가 아니다. 사진이 보여주는 거리가 당신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성훈 기자

■ 기자수첩

지난 3월 19일 진행된 제1차 학생대표 정기간담회(이하 간담회)에서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 강의를 시행한 것에 대해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수업에 결손이 없어 환불이 불가하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도 총학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계속됐지만, 본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총학은 학사 운영방안에 대한 학생의 정확한 의사 파악을 위해서 수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간담회 이후 바로 SNS를 통해 간담회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 총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부에 직접 학생의 요구사항을 건의하고 답변을 신속히 전달했다.

딜레마를 빠져나오려면

하지만 학생은 총학의 처신에 만족하지 않았다. 총학이 건의해서 성사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일, 본지가 실시한 '대학 본부 코로나19 대처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5%가 본부의 대처에 불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는 총학과 본부를 향한 질타가 난무하고 있다. 총학이 학생을 대변하지 못하고 학생과 본부 사이에서 서로의 의견 전달만 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후 7월 1일 우리학교 학생 256명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했다. 본부를 향한 반발의 메시지가 다. 본부는 제5차 간담회에서 소송의 피고 대상은 판결 전에는 소송 안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을 빌미로 등록금 환불

문제를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본부는 등록금 반환 여부를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총학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총학은 본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맞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친 교내 일부 학생들은 '한성소통위원회(이하 한소위)'를 구성했다. 총학이 학생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니 학생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한소위는 본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외부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총학은 대학본부에게 효과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학기부터 이어진 소통과 대응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지 총학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슬비 기자

■ 의화정

너무 많은 자유는 또 다른 구속일까?

'감정대리인', 최근 발표된 트렌드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대리인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무엇이든 네 이버지식인에 묻고, 지식인을 진짜 사람으로 착각하는 시대, 정보의 과잉과 가짜 뉴스 속에서 결정 장애를 겪고 있는 시대, 이제 인간은 원초적 본성인 감정조차도 타인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일까?

"신은 죽었다." 니체의 선언 이후 인간은 제한된 육지의 삶을 벗어나 망망대해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는 폭풍우로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게 했지만,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수평선 너머를 보고 싶어 하는 인간의 호기심은 항해를 포기하지 않게 했다.

신이 정해 준 대로가 아닌 각자가 삶의 주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달콤했다. 영리한 인간은 폭풍을 통제하고 필요시 적절한 정도의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다른 이의 햇살을 가리거나 나의 폭풍이 누군가를 헤치지 않는 한 서로의 항해 방식에 알 가알부하지 않을 제도를 구축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자살은

늘고 있고, 분노와 폭력을 주체하지 못해 '자유'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죽음의 수용소에 서'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현대인의 우울증과 자살, 분노의 원인을 '의미 상실'에서 찾는다. 이런 병적 증상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라는 것이다.

두 세 살만 되도 스스로 운동화 끈을 매겠다고 우길 정도로 행위에 대한 결정권은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힘이다. 자기감정의 주인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이들이 삶의 추동력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인간은 애초에 완전한 자유를 감당할 힘이 없는 존재였을까? 폭풍을 견디고 통제하며 더 많은 햇살을 받기 위해 자신이 만든 세상, 그 속에 갇힌 것일까?

* 감난도 교수는 이를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감정대리인이다. 이들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 연애 감정을 느끼거나 명품을 시형하는 행위로 소비를 대신하는 유형이다. 둘째는 감정대변인 유형이다. 이들은 리액션을 대신하는 관촬 예능 프로그램을 즐기거나 뉴스를 읽을 때도 댓글을 먼저 읽는 유형이다. 셋째는 감정 코칭 및 감성 큐레이션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맞추어주기를 희망하는 유형이다.

나은미(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

■ 낙산에 올라

시민활동가 김영경 씨는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 현행범을 검거한 바 있다. 주변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검거했지만, 그가 현장 인근에서 들은 것은 '여자도 잘못이 있네'라며 여성을 탓하는 목소리였다. 그가 겪은 사건처럼 사회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책임을 이야기하곤 한다. 피해자의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을 지적하고, 조신하지 못한 행동이 본능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가해자에게 아무런 빌미도 제공하지 않는 '완전무결한 피해자'에게만 동정이라는 시혜를 베풀어 주는 꼴이다.

옷차림이 성범죄를 유발하는 것이라면, 히잡을 입은 여성에게는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무엇을 입느냐와 관계없이 성폭력은 어떤 사회에서나 발생한다. 외부 자극을 참지 못해 범죄가 발생한다는 생각은 모순이다. 포장되지 않은 빵이

'원인 제공'이라는 것은 없다

사람의 식욕을 자극했다고 해서, 계산하지 않고 빵을 훔쳐간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최근 일산 동부경찰서가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실시한 에스컬레이터에서 '옆으로 서기' 캠페인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중단됐다. 옆으로 서면 시야각이 넓어져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추진된 캠페인이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옆으로 서면 뒤에서 누가 무얼 하는지 감시할 수 있으니 예방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가해자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를 예방하는 주체전도의 상황이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여성에게 '싫어요! 안 돼요!' 외치기와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는 것 따위를 가르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피해자에게 평소 행동거지를 바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대상이 아닌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며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가치관을 가르쳐야 한다.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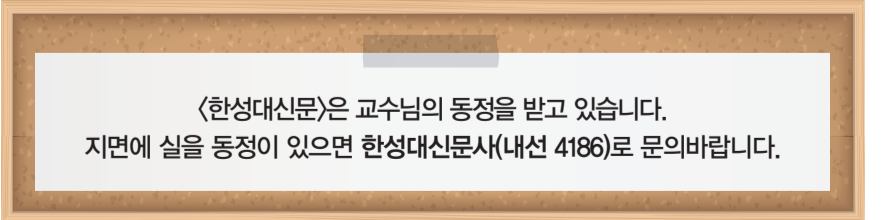
성범죄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용어로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다. 한국심리학회 심리학 용어사전에는 '수치심'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결점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고 판단할 때 발생하는 정서'이다. 피해자의 당혹스러움, 분노 등이 결부된 감정을 대변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고개를 들지 못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닐까' 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탓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조현미(사회과학 2)

기자사령

- 임수습기자 송정원(인문 2)
- 박현규(IT 2)
- 신혜림(상상력 1)

퇴부장기자 안현경(사회과학 3)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환 전신송 편집국장 박희연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제35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반짝이는 당신의 감성을 기다립니다

모집기간

2020년 9월 14일 ~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주 제

자유 (주제에 제한이 없음)

제출형식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제출방법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e-mail로만 접수 가능)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발 표

한성대신문 562호 (11월 30일 발행)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 원 및 상패
시 - 40만 원 및 상패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10pt / 당선 80pt (가작 60pt)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박희연 편집국장 010-3412-1839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ansungnews

페이스북 메시지 @hansungpresscenter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 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당선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